

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

사업구분	임기 내	계속	총사업비	842백만원
------	------	----	------	--------

□ 사업개요

- 100만 대도시와 일반시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효율적 행정권한 지속
- 특례시 도입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실현 및 광역시급 자치권한 확보 필요

□ 목 표

- (법적지위) 지방자치단체 종류 신설,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요구
- (재정분권)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
- (사무이양)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
- (조직특례)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및 자율권 강화
- (법령정비) 개별법으로 분산(이원화)된 대도시 사무특례 해결

□ 추진계획

- **【1단계】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2018년)**
  -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식 체결 및 공동대응기구 구성
    - <상생협약식> 4개 대도시 ‘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’ 상생협약 체결 및 ‘특례시’ 지정 촉구 ‘공동건의문’ 채택
    - <공동대응기구> 100만대도시 단체장 및 실무진, 연구진 등이 함께하는 공동대응기구 구성으로 참여, 소통·대화를 통한 공동 해법모색

<p><b>&lt; 공동대응기구 구성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명 칭 : 인구 100만 대도시 「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」</li> <li>· 위원장 : 공동위원장 체제</li> <li>· 위 원 : 20명(시별5명) - 도·시의원, 분권(단체) 전문가, 시민 등</li> <li>· 조 직 : 분과위원회 구성</li> <li>· 회의주기/주체 : 분기별(연4회), 4개시 순환 개최</li> <li>· 기 타 : 시정연구원 공동 연구 병행</li> </ul>
---

- **【2단계】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합동 연구용역 추진(2019년)**
  -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    - 기존 연구용역 추진이 5년 전에 시행되었으므로, 환경변화와 현실 여건에 맞는 합동연구용역 필요
  - ※ (기추진)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 (5개 대도시)
    - ‘13. 2.25 ~ 8.24, 5개시 공동용역 / 한국지방세연구원

○ **[3단계] 특례시 지정과 별도로 대도시에 걸맞는 특례 확보(2020년)**

- 특례시 지정 등 법령 개정과 별도로 대도시에 걸맞은 특례사항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실리적 개선 우선 추진
-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 가능한 조직특례 우선 반영 요구
  -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덕양구(일반구) 분구 승인 요청
- 도비의 시비 전환\*, 도 사무의 추가 이양 우선 추진
  - \* 도세인 취득세를 대도시세로 전환 등
- 관내 사법기관\*의 독립기관화 등 의정부시에 집중된 정부기관의 고양시 이전 및 신규설치 기관 유치 선제적 추진
  - \*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,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

○ **[4단계] 지방자치단체 종류 신설,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법령 개정 추진(2021년~)**

-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활동,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· 지속적 논의 등으로 조속한 특례시 법적지위 법령 개정 추진

□ **사업기간 : 2018년 7. ~ '2022년 6. (계속)**

□ **연도별 추진계획**

단위사업	'18.7	'19	'20	'21	'22.6	임기후
실리적 개선 추진	공동대응기구 구성	100만 대도시 합동연구용역	재정·사무·조직 등 특례	특례시 지정 법령개정 추진	특례시 지정 법령개정 추진	특례시 지정 법령개정 추진
법령개정 추진	공동건의문 채택	특례시 및 분권모델 검토	각종 특례 법안 발의	특례시 지정 법안 발의	특례시 지정 법안 발의	특례시 지정 법안 발의

□ **연도별 사업비**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사업	구분	계	기투자	'18.7	'19	'20	'21	'22.6	임기후
대도시 특례확보	국비								
	도비								
	시비	842			261	131	200	250	
	기타								

□ **쟁점 및 대책**

- 쟁점 : 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
- 대책 :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으로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

□ **타 기관 협조사항**

-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- 고양시, 수원시, 용인시, 창원시
-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법령 개정 - 행정안전부